

성장 더디고 잠재력 갖춘 호남 예산 배분 늘려야

문재인 시대
광주 전남 현안 점검

주요 산업 집중된 수도권·영남 편중...인구 적은 광주·전남 피해
무안공항 등 국가기반시설 경제성 낮다며 예산 차별·투자 지원

<7> 수요중심 예산원칙 수정을

수요만을 강조하는 현재의 국비 배분은 결국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과거 주요 산업 및 기반시설이 수도권과 영남을 중심으로 구축되면서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광주·전남은 이 같은 예산 배분 원칙에 반반이 '피해자'가 되어야만 했다. 또 무안공항, 호남고속철 2단계 등 정부가 결정해야 할 국가기반시설 설치에 대해 유독 지방자치단체의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하며 예산 집행을 미루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성장 속도가 더디고 잠재력을 갖춘 지역에는 국비 지원과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예산 배분 원칙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5년도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13건 가운데 대통령 공약

사업인 여수~남해 간(동서해저터널, 사업비 5040억원)도 건설사업이 보류되고, 압해~화원 2차로 신설(4135억원) 등 4개 사업이 탈락했다. 이유는 경제성(B/C·비용 대비 편익)부족에서 낙제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압해~화원 2차로 신설 B/C는 0.17이었던 반면, 탈락한 나머지 사업도 모두 0.5 미만이었다. B/C는 미래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현재 가치로 해 편익의 현재 가치를 비용의 현재 가치로 나눈 값으로, 보통 1.0 이상이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업성을 강조하는 B/C 분석을 사회기반시설에까지 적용하면서 인구가 적고, 산업 간 연계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못한 광주·전남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신규 투자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는 지역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 2001년 개통한 서해안고속도로는 인천~목포(353km)를 연결해 그동안 8시간 걸리던 인천~목포 주행시간을 4시간

대로 줄여 연간 6000억원 가까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목포 등의 관광객 급증을 이끌고 있다. 지난 2015년에서야 개통한 호남고속철도는 '경제성'을 내세우며 호남에 대한 철도 투자를 차일피일 미루었던 정부 논리와는 반대로 관광·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를 촉진하며 지역 발전의 엔진으로 거듭나고 있다.

정부가 현재 가치로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면서 기반시설의 설치 후 신규 수요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광주·전남의 다양한 자연·문화·역사·음식 등 관광자원의 잠재력을 파악해 이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지원이 선행돼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광주 비엔날레 국제타운 조성 사업도 경제성(B/C·비용 대비 편익)부족에서 0.8 이하가 나와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종합평가에서도 0.5 이하로 나온 것으로 알려져 경제성분석, 종합평가 모두 기준점을 넘지 못했다. 전남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목포~제주 간 해저터널 건설사업 역시 지난 2010년 0.84로나와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추진되지 못했다.

무안공항 시설 보완은 광주공항과의 통합에 대한 광주시외의 합의를 이유로, 호남고속철 2단계(광주송정~목포)는 무안공항 경우 문제로 각각 국비 지원 제 미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가 노골적으로 '영·호남 차별 예산'을 수립해 지역 국회의원으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광주·전남은 B/C가 낮다며 국비 지원을 거부하고, 영남지역은 B/C가 1.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 주는 '차별'을 노골화했기 때문이다.

노경수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은 "각 지역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발전을 경쟁해야 하며, 정부부처는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정부는 정권 지지기반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정부의 재정 배분 원칙을 새롭게 정립해 각 지역이 다양한 성장동력을 갖고 국가 전체 발전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옛 도청 복원, 5·18 진상규명 속도

광주시, 복원 지원팀 구성...내달중 범시도대책 공청회

광주시가 5·18 진상규명과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을 위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서 진상규명과 옛 전남도청 복원 협력을 약속하는 등 새 정부 출범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기 때문이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가장 옛 전남도청 복원 지원팀을 구성, 정부부처와 함께 추진방향·일정 등 구체적인 복원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원팀은 시청 5급 사무관을 팀장으로 6~7명의 팀원으로 구성했다.

다음달 조직개편을 통해 5·18 진실규명지원단과 함께 정식직제로 전환한다. 지원팀은 옛 전남도청 복원에 대한 범시도대책위원회의 계획안 마련, 시·도민 공청회 개최, 정부 등과의 원활한 협의 등을 추진한다.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는 다음 달 순순계 연다. 옛 전남도청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옛 전남도청 현관 등 복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확보하는 업무도 맡는다.

범시도대책위는 광주시, 광주시의회, 광주시교육청, 5·18 단체,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전교조, 민변 등 각계 단체 등을 망라한 결집체로 지난해 9월 출범했다.

이와함께 진상규명과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행정지원 체계로 행정부시장이 총괄본부장을, 도청 복원은 지지행정국장, 진상규명은 인권평화협력관이 맡아 추진한다.

진상규명 부문에는 5·18 헌법전문수록 국민위원회, 진실규명 지원단,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이 참여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5·18헌법전문수록 국민위는 민간 협의체인 5·18역사왜곡대책위를 전환해 운영하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화문 1번가' 접수 시작

광주시, 오늘부터 5개 구청

광주시는 문재인 정부 정책제안 접수창구인 '광화문 1번가'를 29일부터 오는 7월 12일까지 광주시를 비롯한 5개 구청에서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국민인수위원회는 국민 모두가 인수위원이 되어 새 정부에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온·오프라인 소통창구 '광화문1번가'를 개설했다. 이는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적극 경청하고, 제안된 의견에 대한 결과를 국민에게 직접 보고해 국민과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새로운 시도다.

제안은 시민 누구나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www.gwanghamoon1st.go.kr) 또는 접수창구에 비치된 서식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권일기자 cki@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 한글공원 내 열린 광장에 있는 '광화문 1번가' 오프라인 현장에서 정부에 바라는 글을 붙이거나 구경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안현호 靑 일자리수석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 1순위로 꼽고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담당할 청와대 일자리수석에 안현호(60)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내정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집무실에 일자

리상황관을 설치하는 등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선 정책으로 책고고 있다.

경남 현안 출생인 안 전 차관은 1981년 행시 25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지식경제부 기획조정실장과 제1차관을 지냈고 이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단국대 석좌교수, 삼정KPMG 고문 등을 역임한 정통 산업관료 출신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한전 등 산자부 산하 기관

비정규직 3만명 정규직 전환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3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산업

부 산하 41개 공공기관과 준공공기관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비정규직 대책 긴급회의를 열었다.

올해 1분기 기준 한전의 비정규직 직원 수는 600명이다. 하지만 청소·경비 등 파견과 용역 등을 포함한 간접고용 직원 수는 7700명에 달한다. /연합뉴스

"경찰, 인권 옹호기관으로 거듭나야"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

유통업 3배 징벌적 손해 강화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가 27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위해 인권보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인권 옹호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은 매우 일리 있고 적절하고 존중할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앞서 25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 등을 거론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수 전제조건으로 경찰의 인권보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 입장을 전달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이 수사권·기소권·영장정구권·공소유지권·형 집행권 등

권한을 장악하고, 검찰을 지휘·감독할 법무부가 검사들에 장악된 현실을 지적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 권한을 분산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은 지난 26일 대형마트·가맹본부의 보복금지 조치를 신설·확대하고 가맹사업자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분과위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맹운동대리점의 불공정행위·갑질을 근절하는데 공정위와 의견 일치를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가맹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 사업자단체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신고제를 도입하는 안도 추진된다. 고의성이 있는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가중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대규모유통업법에 새로 도입한다.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에 규정돼있는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하도급법 품 단가 조정 사유에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하도록 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바로 하도급 대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추진된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중·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광공인중개사

상 가 건 물

1. 쌍촌동 5층 상가건물 대200㎡ 매11.8억원(보9,500 월500 포함)
2.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471㎡ 매14.8억원(보1,500 월780 포함)
3. 용문동 4층 상가건물 대468㎡ 매11.8억원(보1,200 월650 포함)
4. 신가동 3층 상가건물 대503㎡ 매9.3억원(보8,000 월450 포함)
5. 신창동 3층 상가건물 대1,050㎡ 매50억원(보6억 월2,000 포함)
6. 북구 우산동 5층 상가건물 대336㎡ 매18억원(보1,200 월900 포함)
7. 월산동 6층 상가건물 대397㎡ 매17억원(보1억 월1,000 포함)
8.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120㎡ 매4.8억원(보5,000 월180 포함)

상 가 주 택

1. 산정동 3층 상가주택 대180㎡ 매8억원(보6,000 월370 포함)
2.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360㎡ 매6.8억원(보2,700 보9,000 포함)
3.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10㎡ 매10.3억원(보3,700 월280 포함)
4.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250㎡ 매5.9억원(보6,000 월240 포함)

공 장 / 토 지 / 기 타

1. 용문동 북광주IC 인근 대로변 공장4동 대6,150㎡ 매58억원
2.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망 임야448,600㎡ 매6.6억원
3. 신가동 생산단지 담745㎡ 매3.66억원
4. 하남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변 대770㎡ 매23억원
5. 광신구 도천동 자연녹지 전1,207㎡ 매2.9억원
6. 산월동 자연녹지 택지조성완료 대290㎡ 매3.3억원
7. 장성군 남면 녹진리 1종일반주거 전2,115㎡ 매2.8억원
8. 매곡동 대광로제비암 1층 상가 주출입구근로 71㎡ 매5.2억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010-2572-4663 **홍창경**
북구 문화예술회관 근처

어싱 매트셋트 동별 대리점 및 영업인력 모집

1. 대리점 마진 개당 30%(약 100만원)
- 영업노하우 전수
2. 영업인력 판매마진 개당 15%(약 50만원)
- 현금, 신용카드 (세금 부담 없음)

★대리점 및 영업인력은 검업, 프리랜서, 주부부업 가능
★어싱매트셋트 기능(21세기 자연치유의 최고봉-어싱)

땅과 접지를 통하여 모든병의 근본 원인을 활성화, 염증제거, 혈액순환, 몸속정전기 제거, 전자파차단 등으로 탁월한 자연치유 및 질병예방기능

※ 점점 질한자들이 늘고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향후 새로운 유망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음.

어싱코리아 광주지사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232-8 동진빌딩 2층
H. 010-8600-0484
☎ (062) 263-9429

2017학년도 후기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21세기 글로벌 엔지니어 리더에 도전하십시오!!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의 실시 [주1~2회, PM 7~11시]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공학석사 학위과정 졸업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 이수(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논문 불필요)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신학관 연구네트워크 구축
-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알찬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실제,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과정 시스템운영
 -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 전형일정

구분	일 정
입학원서 작성	2017. 6. 5.(월) ~ 2017. 6. 16.(금) 09:00~18:00
입학원서 접수 (제출서류 포함)	우편 2017. 6. 5.(월) ~ 2017. 6. 16.(금) 09:00~18:00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창구 2017. 6. 5.(월) ~ 2017. 6. 16.(금) 09:00~18:00
전형일	2017. 6. 27.(화) 10:00~
합격자발표	2017. 7. 20.(목) 11:00(산업대학원 홈페이지)
- 모집학과
 - 건축공학/기계공학/산업공학/재료공학/전기전자컴퓨터공학/토목공학/화학공학/환경에너지공학/환경경농융합/식품·외식산업학/지역환경자원공학/전자컴퓨터공학(계약학과)
- 문의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화] 062-530-1607 [팩스] 062-530-1942
 -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NDUSTRY TECHNOLOGY DONGNAM NATIONAL UNIVERSITY